

건설동향

BRIEF_{ing}

• 레미콘 현장 배치플랜트 정책 동향과 시사점

- 레미콘의 공급망 변화, 건설 현장관리 핵심 변수로 급부상
- 건설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현장 배치플랜트 규제 완화 발표와 업계의 반응
- 레미콘 적기 공급과 건설업 상생을 위한 균형 잡힌 개선안 마련 필요

• 디지털 인프라 확장 속, 데이터센터 건설 현황과 산업적 시사점

- 디지털전환 가속화에 따른 데이터센터 건설 수요 증가와 핵심 인프라로의 부상
- 글로벌 데이터센터 시장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필요
- 데이터센터 관련 표준 및 규제 체계 정비 등 정부 차원 지원 강화해야



레미콘 현장 배치플랜트 정책 동향과 시사점

- 레미콘 공급망의 변화, 다양한 생산방식과 상생을 전제한 공급 방안 마련 필요 -

박상현(부연구위원 · shpark@cerik.re.kr)

레미콘의 공급망 변화, 건설 현장관리 핵심 변수로 급부상

- 최근 3년간 자재비와 인건비 인상에 따른 전체 공사비 상승이 사업 착공과 공사를 지연시킨 주요 요인인 것은 자명한 사실이나, 도시계획에 의한 구조의 변화·확장과 환경 관련 규제 강화에 따른 레미콘 공급망 변화는 건설 현장에서 관리의 핵심 제한요인으로 대두됨.
 - 건설산업의 여건은 공사비 급등 시작 이전인 2020년 2월 대비 2025년 2월 공사비 지수 131.04¹⁾로 31.3% 상승하여 국책사업 유찰과 공사비 증액 분쟁 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으며, 이와 함께 주요 건설자재인 레미콘 공급환경 변화까지 더하여 착공 지연 또는 공사 중단이 발생함.
 - 고도성장 중심의 도시계획에서 지속가능 및 경제·문화 주도형 도시계획으로 변화함과 동시에 각종 환경 관련 규제도 강화되면서, 도심지에 있는 레미콘 생산공장은 계속된 민원으로 폐쇄 및 철거 후 도시 외곽으로 이전하였거나 추진 중임.
 - 도심지 내 건설 현장은 도시 외곽에 레미콘 생산공장에서부터 공급됨에 따라 기존 대비 거리 증가 및 도심지 교통체증 등의 영향으로 적시 납품은 요연한 상황으로 변화되면서 공사 지연의 주요한 관리 요인으로 대두됨.
- 서울시는 전국 지자체 중에 인구 밀도가 높고 급격하게 성장한 도시 중의 하나이며 1980년 이전부터 레미콘 생산공장 이전을 제기하였으며, 각종 환경 관련 법령 제정²⁾으로 이전 압박은 가속화되어 5곳의 레미콘 생산공장 중에 현재 2곳만 운영됨에 따라 공급 물량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임.
 - 레미콘 공장의 도시 외곽 이전은 폐기물 발생, 비산먼지, 교통혼잡 등으로 인한 지역 생활환경 매력도 저하 및 환경오염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추진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함.

1) 한국건설기술연구원(2025), “2025년 2월 건설공사비지수 동향”

2) 레미콘 공장 이전의 가속화와 공사장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법령으로 「대기환경보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음.

- 서울 내 레미콘 생산공장은 성수동(철거 완료), 풍납동(철거 진행 중), 개봉동(철거 완료), 세곡동, 장지동에 있었으나 세곡동과 장지동을 제외한 나머지 3곳은 철거·이전되었으며, 2곳의 레미콘 공장의 연간 생산량은 139만^m로 기존 연간 생산량(317만^m) 절반 아래로 감소함.
- 레미콘 공장 철거 요구는 더욱 거세지고 건설 현장에 레미콘 적시 공급은 한계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전과 같은 극단적 조치가 아닌 상생의 방향에서 논의가 필요함.

● 정부는 도심 내 유휴 부지가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안정적 주택 공급을 통한 국민 주거 안정화를 위해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발의로 도심지 내 공급 물량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안정적인 레미콘 공급을 위한 준비도 함께 고려할 시점임.

- 기존 주택 정비사업 중심으로 추진해 온 서울시의 경우 ‘신속한 사업 추진 지원 정책³⁾’을 노후 도심지 재개발사업으로 확장·적용을 발표함에 따라 레미콘 공급 물량 확대가 필요함.
- 서울시의 재건축·재개발사업 현황⁴⁾을 살펴보면, 2025년 3월 기준 183건의 정비사업이 추진 또는 진행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착공신고 또는 일반분양승인 단계 이후에 포함되는 69건을 제외한 114건은 착공신고 이전 사업으로 분류됨.
- 대규모 정비사업 대상지가 도심지 인근에 인접해 있고 대부분 착공신고 이후 단계로 확인됨에 따라 레미콘의 안정적 공급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며, 동시다발적 진행을 가정한다면 콘크리트 공급 부족 현상의 발생 가능성이 높음.

건설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현장 배치플랜트 규제 완화 발표와 업계의 반응

● 최초의 현장 배치플랜트 설치에 관한 근거는 「레디믹스트콘크리트현장배치플랜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지침」(건설교통부고시 제1995-274호)을 통해 마련되었고, 이후에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5-474호)에 현장 배치플랜트 설치 관련 규정을 그대로 반영하면서 이전의 지침은 자동적으로 폐지됨.

- 현장 배치플랜트 도입을 처음 논의한 시점은 단정할 수 없으나, 「레디믹스트콘크리트현장배치플랜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의 제정 이전부터 언급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필요성은 해당 규정의 제정 이유와 당시 시대적 상황(동시다발 대형 건설사업 진행 → 막대한 양의 레미콘 물량 필요)에 따른 공급 대란 해소를 위해 논의되었을 가능성 높음.
- 「레디믹스트콘크리트현장배치플랜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내용은 「건설공

3)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계획임.

4) 서울시 정비사업 정비공법을 통해 구득한 자료임.

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42조부터 제45조에 그대로 반영되어 현재도 동일한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 현장 배치플랜트의 레미콘 생산방법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5조(건설자재·부재의 범위)를 통해 유추해 보면 레미콘 공장에서 생산하는 습식방식⁵⁾으로 볼 수 있으며, 레미콘이 생산되는 장소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음.

- 국제 표준 규격 ISO 19720-1 (Building Construction Machinery and Equipment-Part 1 : Terminology and Commercial Specifications)은 현장 배치플랜트를 이동식 콘크리트 혼합 플랜트 (Mobile Concrete Mixing Plant)로 통칭하고 있으며, 배치플랜트의 시간당 이론적 생산 용량에 관한 수식을 함께 제시하여 운영 중심의 지침으로 여겨짐.
- 미국의 ASTM C94/C94M은 현장 배치플랜트에 대해 특별한 용어로 지칭하지 않지만, 세부 내용에서 레미콘 생산 핵심 설비인 배치플랜트의 각 구성 요소가 갖추어야 할 성능과 유지관리 기준뿐만 아니라 배합 및 계량, 운송, 시험 및 검사, 합격 기준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 국외 지침서는 국내 표준시방서와 유사하여 직접 비교에 무리가 있으나 주요 내용을 열거하면, 국내 규정은 현장 배치플랜트 사용을 위한 설치 방법부터 현장 설치조건 및 레미콘전문제조업자와의 공동협력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반면에 국외 지침서는 다양한 생산방식을 고려한 배치플랜트 운용 및 운송에 관한 방법을 함께 제시함에 따라 건설 현장 여건에 따라 배치플랜트 운영에 관한 선택 폭이 넓다고 판단됨.

● 정부는 공사비 현실화 등 건설투자 보안을 통한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관계부처 합동, '24.12.)에서 건설투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민간부분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방안 중 하나로 대형 현장 등에 레미콘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배치플랜트 설치 및 생산기준 완화 개정안을 발표함.

- 완화 규정은 △제43조제1항의 설치조건 확대, △제43조제2항 후단 및 제44조의 레미콘전문제조업자에 의한 50% 의무 공급량 기준 삭제, △제2조제16호의 배치플랜트 설치할 수 있는 자를 발주자로 확대, △제43조제3항의 생산물량 외부 반출 허용 등을 담고 있음.
- 현행 제43조제1항은 콘크리트를 비비기 시작한 후 90분 이내에 트럭믹서로 공사 현장에 운반할 수 없는 벽지지역·도서지역·교통체증지역 등으로 한정된 것을 90분 이내 트럭믹서로 운반할 수 없는 모든 경우로 변경함으로써 현장 배치플랜트 설치 대상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의 취지로 보임.
- 제43조제2항 후단 및 제44조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상생협력법)」 제32조에 따라 건설현장 소요 물량의 50%만 현장 배치플랜트에서 생산하도록 제한한 기준을 삭제하여 현장 배치플랜트로부터 전량 생산·공급할 수 있도록 변경함으로써 레미콘 자급자족을 통한 개정안의 실효성 제고 방안으로 보임.
- 제2조제16호에서 규정한 현장 배치플랜트를 설치할 수 있는 자로 시공자에 한정된 것에서 발주자로 확대하였으며, 배치플랜트 설치에 관한 판단 확대뿐만 아니라 개정안의 실행 동력 확보를 위한 취지로 여겨짐.

5) 최민수(1996), "건설 레미콘 생산시스템의 도입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제43조제3항의 현장 배치플랜트에서 생산된 물량이 외부로 반출 금지에서 허용으로 변경하였으며, 레미콘 공급처의 다양화를 통한 인근 건설 현장의 원활한 공사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 현장 배치플랜트 설치 완화 정책 발표 이후 레미콘 업계의 강력한 반발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을 강행하지 않고 의견 수렴 절차를 더 거쳐서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힘.
 - 레미콘 업계는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건설자재 업체에 대한 역차별 행위, 사업 조정신청 일괄 기각에 따른 상생협력법 위반, 과잉 생산에 따른 업계 생존 위협 등을 이유로 개정안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함.
 - 이번 정부 개정안에 관해 레미콘 업계가 민감한 것은 경기 침체에 따른 역대 최저 가동률로 레미콘 업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현장 배치플랜트 관련 신규 공급자 진입에 따른 경쟁과 공급량 급감이 핵심적인 이유임.
 - 레미콘 업계 관련 단체의 다양한 반대 의견뿐만 아니라 현장 배치플랜트 설치·운영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일감 감소에도 영향을 미쳐서 운송비 증액 요구 및 레미콘 업체 사업주와 운송사업자 간 갈등으로 번져 나갈 수 있음.
 - 일각에서는 현장 배치플랜트의 설치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바라보는 시선도 있으며, 이유는 적지 않은 설치 비용과 복잡한 행정 절차가 걸림돌로 작용하여 확산의 가능성이 작다는 의견도 존재함.
 - 국토교통부는 의견 수렴 기간에 레미콘 업계에서 전달한 의견과 일각의 시선을 고려하여 개정안 강행보다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힘.

레미콘 적기 공급과 건설업 상생을 위한 균형 잡힌 개선안 마련 필요

- 국내에서 보편화된 레미콘 생산방식은 현장에서 요구한 성능에 따라 공장에서 비빔을 완료한 후 트럭믹서에 신고 납품 및 공급하는 습식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특정 방법의 집중화로 외부 환경 여건 변화의 파장은 업계 전체에 쉽게 번지는 양상임. 산업 전반 활력 제고를 위해서 레미콘 적기 공급을 위한 방안과 함께 획일적 생산방식을 탈피하여 다각화를 위한 정책 및 기반 조성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레미콘은 공장에서 비빔을 완료한 이후 트럭믹서를 이용하여 건설 현장에 공급하는 체계로 운영함에 따라 현장으로부터 근거리에 위치할수록 적기 납품 및 품질 유지에 유리하고 기업 운영에도 이점이 많음. 따라서 대다수의 레미콘 생산공장은 개발이 활발한 도시 인근에 있음.
 - 획일적인 레미콘 생산방식과 공급 체계는 균질한 품질 확보에 좋지만, 지금과 같이 공장이 도시 외곽으로 이전하면서 거리 증가와 함께 교통체증에 의한 납품 시간 상승으로 원활한 공사 진행의 걸림돌로 작용할 뿐 아니라 품질이 저하될 우려도 있음.

- 정부의 현장 배치플랜트 설치 완화 개정안은 레미콘의 적기 공급과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했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업계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발표된 행정예고의 선회 입장을 밝히면서, 도심지 레미콘 공급 관련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겨짐.
- 개정안이 건설산업 활력 제고에 필수 정책이라고 확인하기에는 다양한 측면에서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레미콘의 적기 공급과 품질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정책인 것은 사실임. 특정 부분의 규제 완화로 인한 레미콘 업계 반발도 이해되므로 건설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생산방식의 다각화 유도를 통한 다양한 공급 방식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음.
- 도시 외곽으로 레미콘 생산공장이 이전하면서 거리 증가와 교통혼잡이 심한 도심지 현장으로 정해진 시간 내 공급이 점점 어려워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 새로운 제품 개발은 레미콘 업계의 생존과 함께 기술력 확장 차원에서 필연적인 일일 수밖에 없음. 레미콘 업계의 자체적인 의지와 노력도 매우 중요하나, 대다수가 중·소규모 레미콘 업체로 구성된 현실을 고려하면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동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레미콘 업계의 다수는 중·소규모 업체이므로 새로운 정책과 외부 환경 여건 변화에 대응이 취약한 것은 사실임. 특히 공급망 변화는 업체의 존폐뿐만 아니라 운송사업자의 생존에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제품 개발은 반드시 선결되어야 함.
 - 최근 레미콘 업계에서 콘크리트 공사 표준시방서(KCS 14 20 00) 기준을 충족하면서 강우 시 가수(加水) 효과에 따른 품질 저하 방지와 3시간 이상 지나도 작업의 성능이 유지될 수 있는 제품을 발표함. 이는 변화된 현장 여건에 맞는 레미콘 품질 기준 확보에 의미가 있고, 현장 배치플랜트 설치 완화에 대한 견해를 줄일 수 있는 사례로 볼 수 있음.
 - 대형 레미콘 업체와 달리 중·소규모 레미콘 업체는 새로운 제품 개발을 위한 자체적인 투자와 노력에 한계가 있으므로 관련 기술 연구자 Pool을 보유한 연구기관과 협력 지원 및 장려하는 정책적 지원 방안도 고려가 필요함.
 - 건설산업은 단계별로 다수의 공정이 복잡하게 연계되고 다양한 참여자 간 협력을 통해 수행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정 부분의 개선 또는 완화보다 다각적인 검토를 통한 해법이 필요함. 이번 개정안처럼 특정 문제를 일소에 해결하는 방법도 필요하나, 건설업이 지닌 가치를 생각해 보면 서로가 상생하는 방법에 관한 방안 제시도 필요함.



디지털 인프라 확장 속, 데이터센터 건설 현황과 산업적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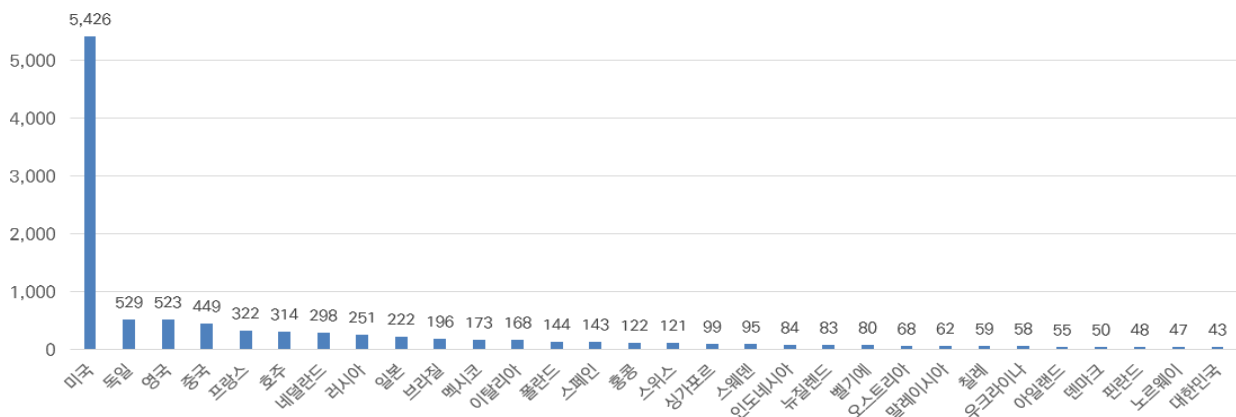
- 데이터센터 건설 수요 급증 속, 기술·시장·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마련 및 정부 역할 중요 -

이규은(부연구위원 · gelee@cerik.re.kr)

디지털전환 가속화에 따른 데이터센터 건설 수요 증가와 핵심 인프라로의 부상

- 디지털전환 및 생성형 AI의 부상에 따른 데이터 트래픽 폭증으로 디지털 인프라인 데이터센터 수요가 증가했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발표 이후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됨.
 - 데이터 트래픽의 증가와 기업들의 클라우드 전환에서 비롯된 글로벌 데이터센터 건설 수요 증가는 최근 3년 새 생성형 AI의 출현과 그로 인한 데이터 사용량 폭증으로 더욱 확산되고 있음.
 - 존스랑라살(JLL)의 글로벌 부동산 전망 자료에 따르면⁶⁾ 전 세계적으로 신규 데이터센터 건설은 다른 어떤 부동산 자산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
 - 현재 미국에 가장 많은 데이터센터가 구축되어 있으며(〈그림 1〉 참고), 2025년 1월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AI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Stargate)’는 미국 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 글로벌 데이터센터 입지 경쟁을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음.

〈그림 1〉 2025년 3월 기준 주요 국가별 데이터센터 수 (대한민국: 상업용 데이터센터 개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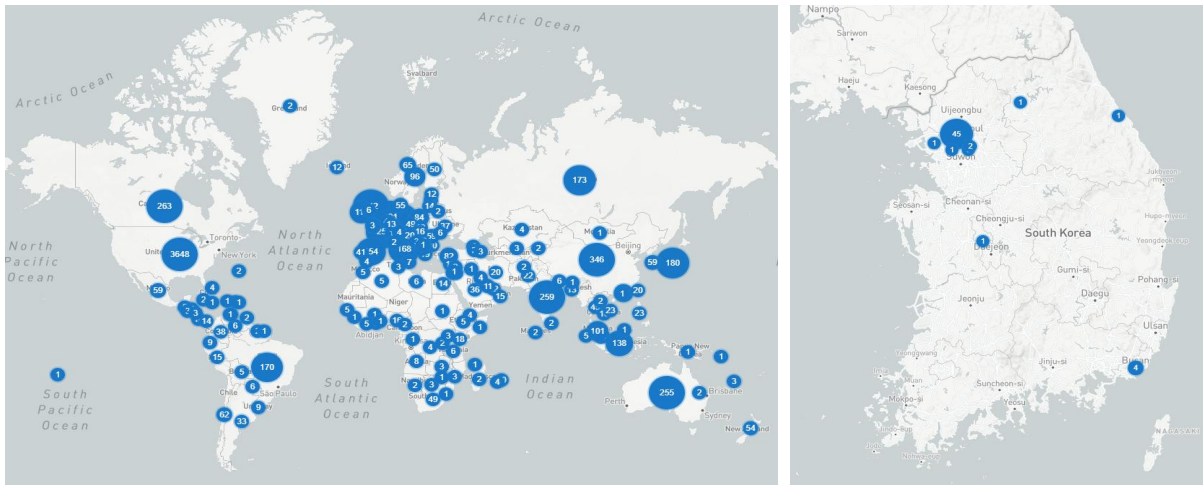


자료 : Cloudscene, <https://cloudscene.com/region/datacenters-in-asia-pacific>

6) JLL, (2024.12), Global Real Estate Outlook – Five Predictions for 2025

- 급증하는 디지털 인프라 수요를 선점하기 위해 MS, 구글, 아마존, 에퀴닉스(EQUINIX), NTT 등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뿐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서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설투자를 추진하고 있음.
 -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건설되던 데이터센터는 지역별 디지털 인프라 수요에 맞춘 지리적 근접성 (Co-location)에 대한 요구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그림 2> 참고), 아시아 태평양지역에 고성능·고밀도인 하이퍼스케일급 데이터센터 건설이 많아질 것으로 기대됨.
 - 글로벌 데이터센터 리츠 1위 기업인 에퀴닉스는 향후 2년간 아시아-태평양 전역에 신규 데이터센터 10 개소를 건설하며 총 3억 5천만 달러 이상을 투자할 계획으로 밝힘⁷⁾.
 - KOTRA에 따르면⁸⁾ 말레이시아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전략과 함께 전력과 물 공급의 안정성과 저렴한 요금, 다양한 투자 인센티브 정책을 바탕으로 데이터센터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2028년까지 누적 5000MW 규모의 데이터센터 용량을 확보하며 공격적인 전략을 펼치고 있음.

<그림 2> 글로벌(왼쪽)·국내(오른쪽) 데이터센터 맵 (Cloudscene과 집계방식 차이로 인해 일부 개수 차이 존재함)



자료 : Data Center Map, <https://www.datacentermap.com/datacenters>

❖ 디지털 인프라 주도권 확보를 위해 데이터센터 건설기술의 특성·핵심 요구사항 이해 필수

- 데이터센터 건설은 고도의 설계 및 운용 기술을 요구하는 신산업시설이며, 고밀도 서버의 운영을 위한 전력 공급 및 냉각시스템, 내진설계, 보안설비 등이 필수적임.

7) EQUINIX, <https://www.equinix.com/kr/ko/lp/asia-pacific-expansion> (접속일: 2025. 4. 10)

8) KOTRA, (2025. 3. 4), 2025년 주목해야 할 진출 유망국 6

- 데이터센터는 대규모 컴퓨터 서버를 집적해 디지털 데이터를 저장·관리하는 특수 설계 건축물로, 24시간 365일 무중단 운영을 위한 전력 공급, 보안시설, 통신설비, 내진설계와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는 내부 습도 관리가 가능한 고신뢰성 환경이 필요함.
 - 최근, 최첨단 다중보안 시스템, 국제공인인증(Tier-III 이상), 고효율 에너지설계, 면진설계, 무인 지능형 모니터링 시스템 등이 데이터센터 건설의 핵심 기술로 적용되고 있음.
 - 언급된 전력 공급 및 전기시스템(MEP) 등의 영역은 통신사나 SI 업체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데이터센터 건설시장에 진입하는 부동산 운용사 및 시공사는 긴밀한 협조 및 파트너십 구성이 필수적임.
-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서는 정부 및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토지 확보와 전력 및 통신 공급선 구축과 같은 유틸리티 인프라의 사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함.
-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는 수백 MW 이상의 전력 소비와 수천 대 이상의 GPU 서버를 수용하는 초대형 시설로 전력망 안정성과 냉각 수단의 고도화가 핵심임.
 -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전 세계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는 2025년에 568TWh, 2026년 최대 1,050TWh 이상으로 예측됨⁹⁾.
 - 따라서, 높은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에너지원의 확보가 필요하며 소형모듈원자로(SMR, Small Modular Reactor)와 같은 혁신적인 오프그리드 솔루션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음.
 - 앞으로 유틸리티 인프라 기술을 보유한 국가와 기업은 향후 디지털 인프라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글로벌 데이터센터 시장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필요

- AI 기술 개발 속도와 정부의 정책 환경 변경으로 인해 데이터센터 수요와 공급의 변동성 증가하였으며, 최근 이슈화된 AI 버블론에 대응하는 수요·공급 맞춤이 필요함.
- 미국에서는 2022년까지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데이터센터 공실률이 증가했었으나, 2022년 말부터 생성형 AI 서비스 사용 급증에 따라 임대 수요가 반등하고 임대료가 급상승하는 양상으로 전환됨.
- 이후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AI 주도권 경쟁으로 미국, 유럽, 아시아 주요 거점에서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건설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지만, 최근 미국의 관세 정책 등의 영향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일부 데이터센터 구축 계획을 취소 및 보류하며 투자 속도 조절에 들어감.
- 일각에서는 공급 과잉에 따른 AI 버블론도 일고 있어, 수요 및 시장에 대한 명확한 분석을 통한 데이터센터 건설 및 투자 진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9) IEA, (2025. 4.), Energy and AI - World Energy Outlook Special Report

데이터센터 관련 표준 및 규제 체계 정비와 함께 글로벌 시장 대응을 위한 정부 역할 강화 필요

- 현재 국내 데이터센터 건설 환경은, 수도권 과밀화 현상, 전력 수급 불균형, 환경적 비용 부담 등을 둘러싼 논쟁이 있으며, 종합적인 정책·규제 체계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수도권에 데이터센터가 집중되면서 전력 인프라 확보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냉각 설비에 따른 환경적 영향 문제와 함께 전자파, 소음, 열섬현상 등 생활 민원도 증가하고 있어 건설 및 인허가 지연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정부는 데이터센터 입지계획 수립, 에너지 효율성 향상, 재생에너지 사용 의무화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정책과 규제를 수립하고, 아울러 지원 정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함.
 - 특히 대용량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전력망 고도화 및 지역 간 전력 수급 균형 확보가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와 같은 차세대 원전 기술이나 에너지저장장치(ESS) 기반의 스마트 그리드 연계 인프라 구축이 병행되어야 함.
- 글로벌 IT 기업의 국내 데이터센터 투자 유치와 국내 건설사의 해외 데이터센터 건설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정부의 전략이 필요함.
 - 해외 사례를 보면, 영국 정부는 데이터센터 액션플랜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AI 성장 구역'을 지정하고 국가 차원의 AI 실행 계획을 발표했으며, 말레이시아는 데이터센터 개발 신청 및 승인 절차를 표준화하고 간소화하는 지침을 발표한 바 있음.
 - 글로벌 IT 기업의 국내 데이터센터 건설 유치를 위해서는 전용 산업단지 지정 및 규제 특례구역을 도입하고 전력인프라 구축 및 요금 체계를 개선하여 재생에너지 연계 확대 등 유인책이 요구됨.
 - 국내 건설사의 해외 데이터센터 건설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서는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과의 파트너십 기반 조성과 함께, 해외 현지 인허가 제도 대응을 위한 정부 차원의 외교 채널 연계, 금융 및 보증 지원, 국제 인증 및 친환경 기술 확보를 위한 R&D 지원 확대 등 정부의 역할이 요구됨.